

2010-12 | 책임연구보고서

**국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국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최 경 환**

# 목 차

<b>I . 서론</b> .....	<b>1</b>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b>II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과 테러 실태</b> .....	<b>4</b>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	4
2.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 .....	9
3.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실태 .....	10
<b>III .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유형</b> .....	<b>12</b>
1. 열차·지하철테러 .....	12
2. 폭탄·생화학테러 .....	16
3. 자살폭탄테러 .....	20
<b>IV .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대응방안</b> .....	<b>25</b>
1. 테러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25
2. 테러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	27
3. 테러대응훈련과 대테러역량 강화 .....	31
<b>V . 결론</b> .....	<b>34</b>

## 표 목 차

<표 1> 다중이용시설 등급 분류기준 .....	6
<표 2> 경보·등급별 지도·점검 기준 .....	7
<표 3> 테러사건 유형별 책임기관 .....	25

## I. 서론

### 1. 연구목적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형의 영업시설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쉽게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테러취약시설이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발표 이후 5월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테러위기 ‘주의’ 경보에 따라, 테러 관련 유관기관별로 전국 대테러 긴급구조대 및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조사 결과, 전국 362개소의 테러 취약시설의 경우 대피로상에 피난 방해 요소가 있거나 유사시 1차 개인보호 장비인 공기호흡기 내부 공기 재충압 필요 등 문제점이 도출된 곳이 31~35곳 등 10%에 달했다. 또한 중앙119구조대 및 시·도별로 1개대씩 운영하고 있는 17개 대테러 긴급구조대는 테러장비 유지관리 상태 및 대테러시 대원별 개인 임무의 이해 정도는 양호했으나, 테러 관련 전문교육 수료자 비율이 32.3%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sup>1)</sup>

경찰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며,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응책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 등 당면한 중요 국제 행사에 대비해 대테러 종합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채널을 유지하며, 테러 첩보 수집·전파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

1) 헤럴드경제, 2010. 6. 16.

각 지방경찰청별로 지휘부는 테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근무를 점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중 특별히 서울역, 부산역 등 시설 내외부의 상가 등 밀집장소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은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사건과 같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하철 경찰대를 중심으로 역내 승강장, 환승통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테러에 취약한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진단하고, 테러 예방에 있어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의 테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국회도서관의 테러 관련 선행연구자료는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도서 138건, 세미나자료 24건, 학위논문 176건, 국내학술지 자료 402건, 88건 등 총 828건 등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련 연구는 국회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단행본 총 154건(도서 146건과 세미나 자료 8건), 학위논문 83건, 학술지 게재논문 95건, 그리고 인터넷 자료 123건 등 총 455건이다. 이중 대다수의 논문 자료는 실내공기와 오염 등 주로 환경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부 자료에서 시설물의 안전시설 기준이나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을 뿐, 테러 관련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극히 적다. 다중이용시설을 다룬 주제중 테러와 관련한 연구는 총 455건 중 13편으로 2.9%에 불과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테러전문대응과정(2009), 소방방재청의 지하공간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2008), 소방방재청의 특수화재 대응매뉴얼(2006) 등이다.

학위논문은 박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경비적 안전대책방안: 이용자의 안전의식 조사에 대하여”(용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등이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는 이경훈·김창훈의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building security control) 디자인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1호, 2009. 5), 윤성훈·이경훈·김지현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 예방 디자인”(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09), 정우일의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2009), 권정훈·김태환·최종균의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2009), 이경훈의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 설계기준 및 설계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치안정책연구소, 2008), 표창원의 “CCTV 등 보안감사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 확보체계 구축방안”(대테러연구 제31집, 2008), 김진혁의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김영택 외 공저의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생물테러 인식도 조사”(2005년도 제59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5), 최성진의 “대한민국 테러공습경보: 효과 극대화 노려 본토 타깃 가능성 높아... 다중이용시설 보안 강화해야”(뉴스메이커 제13권 제41호, 통권 595호, 2004) 등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편이나, 아직은 연구된 관련 자료가 적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관련 연구의 추세는 위의 선행연구 자료에서와 같이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 디자인, 설계기준 및 설계기법 개발 등과 같이 시설물 건축면에서, 또한 CCTV 등 보안감사 장비 활용 등 시

설물 안전관리나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을 위한 경찰·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의 역할의 관점에서, 그리고 열차 및 지하철테러와 같은 테러 유형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해 테러 관련 도서와 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테러대응방안을 다중이용시설에 특화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실태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유형 분석을 통해 경찰의 관점에서 대테러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II. 다중이용시설의 현황과 테러 실태

###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시설 유형별 국제테러 피해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병원, 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이 테러 위협에 가장 취약하다.<sup>2)</sup>

국내에서도 최근 PC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고, 가스폭발, 건물붕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집중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슈퍼마켓, 호프집, 노래방, 음식점, 사진관 등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부터 백화점, 할인마트 등과 같이 대형규모

2) 윤성원 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예방 디자인”, 한국공간구조학회지 제9권 제3호, 통권 37호, 한국공간구조학회, 2009, 10면.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안전관리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방법에서는 몇 가지 업종을 다중이용업<sup>3)</sup>으로 정하고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외에 소방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표 1>과 같이 등급 분류하고 있다.<sup>4)</sup> 다중이용시설은 교통관련시설로 열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판매회의시설로 판매시설, 컨벤션·호텔, 문화체육시설로 경기장, 공연장·영화관, 위락시설로 구분하여, A, B, C 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보등급별로 <표 2>에서와 같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

#### <표 1> 다중이용시설 등급 분류기준

---

3) 소방법령상 다중이용업의 범위(소방법시행령 제4종의 2)에는 ① 바닥면적 66㎡이상의 일반 음식점 ② 노래연습장 ③ 비디오물 감상실 ④ 단란주점 ⑤ 유흥주점 ⑥ 기타 화재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등이다.

4) 경찰청 대테러센터-1546(2007. 05. 28)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계획에 의거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분	시설	등급	분 류 기 준
교통 관련 시설	열차역	A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KTX역사
		B	기타 시도 KTX 역사 및 철도청 기준 1급 역사
		C	철도청 기준 2급 역사중 지역별 대표적 역사
	지하철역	A	1일 이용인구 기준 서울 10만명 이상인 환승역 부산(기타): 1일 이용인구 4만5천(1만5천)명 이상인 지하철역
		B	서울: 1일 이용인구 10만명 이상 역사 및 7만명 이상인 환승역 부산(기타): 1일 이용인구 3만(1만)명 이상인 지하철역
		C	A, B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별 주요 지하철역
	터미널	A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표적 버스터미널
		B	타시·도 노선 1일 200회 이상인 종합버스터미널
		C	지역별 대표적이고 상징성을 보유한 주요 버스터미널
판매 회의 시설 등	판 매 시 설	A	1일 이용인구 2만명 이상인 판매시설
		B	1일 이용인구 1만명 이상인 판매시설
		C	지역별 대표적이고 상징성을 보유한 판매시설
	컨벤션 · 호텔	A	국제행사가 빈번한 대형 컨벤션 센터 서울·제주·광역시, 주요행사가 많고 상징성이 있는 특1급 호텔
		B	서울·제주·광역시 소재 특1급 이상의 호텔 시·도별 대표적이고 상징성 있는 특급이상의 호텔
		C	서울·제주·광역시 소재 특급 이상의 호텔 시·도별 대표적이고 상징성 있는 1급 이상의 호텔
	대형 빌딩	A	서울·광역시 소재, 대표성·상징성을 보유한 25층이상 대형건물
		B	지역별 대표적이고 상징성 있는 20층이상의 랜드마크(LandMark) 건물
		C	지역별 상징성을 보유한 대형건물
문화 체육 시설	경기장 등	A	월드컵 경기장 10개소
		B	프로축구·야구단 홈경기장 및 관람석 3만이상의 실외 경기장 5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보유한 실내경기장
		C	지역별 대표적이고 상징성을 보유한 경기장 시설
	공연장 · 영화관	A	서울·광역시 소재, 관객 2천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대형공연장 스크린수 20개 이상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B	기타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공연장 스크린수 15개 이상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	지역별 상징성 보유 대형공연장 및 멀티플렉스 영화관
	위 락 시 설	A	최대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표적 놀이시설·공원
		B	3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놀이시설·공원 외국인 다수 출입하고 상징성을 보유한 대형 나이트클럽
		C	지역별 대표성·상징성을 보유한 놀이시설·공원·나이트클럽

<표 2> 경보·등급별 지도·점검 기준

구분	A급	B급	C급
평시	·분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 모든 시설, 지방청 선별 점검)	·분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 모든 시설, 지방청 선별 점검)	·분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 모든 시설, 지방청 선별 점검)
관심	·평시 점검 체제 유지 ·연락체계 점검		
주의	·테러발생 대비 사전 유형별 출동훈련 실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테러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보·순찰 활동 강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요 시설 순찰 강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계	·시설주 합동 간담회 실시 및 테러 정보 교환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중점 동향 파악 ·시설별 점검 강화 -테러징후에 따른 필요 사항 점검 철저 -사고 발생시 대피통로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촉구 ·순찰 활동 철저	·테러발생 대비 사전 유형별 출동훈련 실시 ·테러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보·순찰 활동 강화	·필요 시설 순찰 강화
심각	·필요 시설 내·외곽 경력 배치 ·시설 주변 검문검색 강화 ·필요 구간 교통 통제 ·테러 이용가능 장소에 대한 정보활동 집중 ·시설주 등과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순찰 활동 배가	·시설주 합동 간담회 등 실시 및 테러 정보 제공 ·시설별 점검 강화 -테러징후에 따른 필요 사항 점검 철저 -사고 발생시 대피통로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촉구 ·필요 시설 내·외곽 경력 배치 ·시설 주변 검문검색 강화 ·순찰 활동 철저	·시설주 합동 간담회 등 실시 및 테러 정보 제공 ·테러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보 활동 강화 ·순찰 활동 강화 ·주변 검문검색 강화

경찰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활동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APEC 정상회의 전후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지하철·고속열차·일반열차 등 철도시설의 대테러·안전역량을 강화하였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5개 도시 지하철역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APEC 기간중 역사내 물품보관함 등 취약요소에 대해 임시폐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징성·위해도 등에 따라 1,262개 시설을 선정하고, 교통관련시설은 첫차출발부터 운행 종료시까지 경찰·군·소방·자원봉사자 합동 근무조 20,600여명을 투입하여 주요 지하철역 등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주요 공항 및 역사에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테러 즉흥태세를 유지했다.<sup>5)</sup>

2006년에는 다중이용시설 1,300여개소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을 1,800여회 실시하였다.<sup>6)</sup>

2007년에는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1,300여개소를 시설별·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본청 주관으로 2회(4월, 10월), 지방청·경찰서 주관으로 13,187회에 걸쳐 지하철역·백화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sup>7)</sup>

2008년에는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1,300여개소를 시설별·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본청 주관으로 1회(5월, 4개소), 지방청·경찰서 주관으로 8,958회에 걸쳐 지하철역·백화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북경올림픽과 관련하여 국제공항(6개소) 테러대비태세를 점검(7. 3~10)하고, 경찰청에 대테러상황실을 운영(3회)하는 등 국제행사관련 테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sup>8)</sup>

5) 경찰청, 2006 경찰백서, 392-393면.

6) 경찰청, 2007 경찰백서, 299면.

7) 경찰청, 2008 경찰백서, 277면.

경찰은 2005년 다중이용시설 1,262여개소를 2006년 1,300여개소로 늘려 재정비하였고, 2007년 1,300여개소에 대해 13,187회 지도·점검을, 2008년에는 1,300여개소에 대해 8,958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 테러정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다.

## 2.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에 있어서 문제점은 첫째, 불특정 다수인의 빈번한 출입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나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건물의 구조에 익숙치 못하고 화재나 테러 등 비상상황시 비상구를 찾지 못하여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대구 지하철참사와 같이 대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업주 및 내부구조의 빈번한 변경으로, 구조적으로 안전시설이 취약한 상태이며, 다양한 유형의 가연재와 실내장식물을 사용함으로 화학테러나 폭탄테러시 밀폐된 공간 특성상 대형 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테러로 인한 화재시 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킴으로써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주나 건물소유주·점유자, 관리인,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화재나 테러 등 비상상황시 밀집한 이용자들의 혼잡과 안전의식 등의 결여로 정상적인 행동을 어렵게 하여,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테러를 대비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에 있어 여러 부처가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며, 법적 근거나 토대도 불명확한 경우가

8) 경찰청, 2009 경철헤서, 262면.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종의 출현으로 업종별 안전제도가 구비되기 이전에 영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휴게텔, 전화방 등의 업종은 안전위험요인이 높음에도 안전관리의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다섯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 시설이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인천공항과 지하철역 등은 대규모 승객수송을 맡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시설 고유의 기능에 치중한 결과, 테러예방에 필요한 감시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테러발생에 취약하다. CCTV는 테러예방보다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운용중이며, 전담 모니터링 요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공항이나 지하철역등은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이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 3.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실태

미국 9·11 테러 이후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9)</sup> 또한 특별한 종교나 정치적인 적대감이 없어도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의 정도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사회 증오형 범죄의 형태로 준 테러리즘(Quasi-Terrorism)이라는 개념을 파생시켰다. 한국은 극단적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적 테러리즘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이지만 단순 성격이상자나 사회병질자에 의한 다중살인적인 사회증오형 준 테러범죄에는 사회안전기반이 최근 들어 크게 취약성을 갖고 있다.<sup>10)</sup>

9) 권정훈 외,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면.

10) 이경훈,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 설계기준 및 설계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40-41면.

2005년도 국내 폭발물 등 협박사건 현황을 보면, 2005년 주요시설 14건, 항공기(공항) 2건, 다중이용시설 115건, 정치인 1건, 외국시설 3건 등이다. 2006년도에는 주요시설 11건, 항공기(공항) 13건, 다중이용시설 52건, 정치인 2건, 외국시설 4건 등이다.<sup>11)</sup>

2007년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해로, 해외여행자 1,300만명 돌파, UNIFIL 파병,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기록, 대통령 선거 등으로 테러유발요인 증가와 함께 테러피해가 증가하였다.

2008년 국제 테러 공격대상별로는 군·경 등(1730건, 53.9%), 민간인(466건, 14.5%),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격(322건, 10.0%) 순으로 나타났다.<sup>12)</sup>

2009.10.30-2010.4.30 국제 테러 공격대상별로는 전체 1,263건 중 외국인시설 103건, 중요인물 88건, 국가중요시설 61건, 군·경 등 589건, 민간인 338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격 61건, 교통수단 18건, 기타 5건 순으로 나타났다.<sup>13)</sup>

국내에서도 탈레반 연계세력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격 반미투쟁과 지하드를 선동하는 이슬람국가의 무슬림이 포착되는 등 테러위협이 나타났다.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다.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있어, 북핵 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통적 테러지원국가인 북한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및 미국 관련시설 테러획책 가능성 상존이 제기되고 있다.<sup>14)</sup>

11) 이경훈·김창훈,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 디자인의 실패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1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45면.

12)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260-261면.

13) 테러정보종합센터(www.tiic.go.kr)의 테러사건 통계자료이다.

14)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117면.

향후 대중 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에 등에 대한 테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Ⅲ.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유형

테러유형은 목적 내지 동기, 주체, 영역, 대상, 그리고 테러행위의 방법 및 수단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는 테러유형을 대상, 수단, 행위방법 등으로 나누어, 테러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대표적인 시설로 열차와 지하철테러, 테러수단인 폭발물과 화학무기를 사용한 폭탄·생화학테러, 그리고 테러행위방법으로 자살폭탄테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열차·지하철 테러, 폭탄·화학 테러, 그리고 자살폭탄테러 등 세가지 테러 유형은 대상, 수단, 행위방법으로 구분할 것일뿐, 실제 일어난 테러에 있어서는 복합되어 있다.

#### 1. 열차·지하철 테러

##### 1) 국내 사례

열차 및 지하철 테러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이다. 열차 및 지하철 테러는 인질협상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가장 큰 테러이다.

러시아, 인도, 영국, 스페인 등의 열차 및 지하철테러로 인해 한국에도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철도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점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sup>15)</sup>

서울지하철의 경우 수송인원이 2006년 1,430,996,090명, 2007년 1,431,757,456명, 2008년 1,446,924,426명, 2009년 1,450,530,740명이었다.<sup>16)</sup> 지난 6월 29일 한국 국가대표팀의 남아공 월드컵경기 중에는 서울 지하철 63만명, 버스 22만명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총 85만명이 수송되었다.<sup>17)</sup> 테러범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특정한 날에 테러를 감행한다면, 그 테러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테러범의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이용성은 높은 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테러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없으며, 테러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대비도 거의 무방비상태이다.

테러공격을 당하는 대상 목표의 특징은 노출성, 중요성, 상징성, 정당성, 파괴가능성, 탈취가능성, 접근성, 용이성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sup>18)</sup> 이에 따른 테러 목표대상물의 우선순위 선호도 평가에서 국회, 청와대, 국방부, 서울역, 63빌딩, 명동성당, 중앙우체국, 서울대학교, 에버랜드 순으로 나타났다.<sup>19)</sup> 다중이용시설이 테러 대상인 경우 그 테러대상 시설은 서울역이며, 이와 관련하여 열차나 서울 지하철이 일차적 목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 192명과 부상자 148명이 발생하였다.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하행선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 객차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정신지체장애인의 방

15) 김진혁,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113면.

16) 서울메트로에서 발표한 연도별 수송인원 통계자료이다.

17) 연합뉴스, 2010. 06. 29.

18) 이태운,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 2010, 400-401면.

19) 위의 책, 403면.

화 화재로 막대한 인적피해와 함께 인적피해금액 총 6백6십1억8천1백만원과 물적피해 총 4백9십2억6천4백만원 등 경제비용이 발생하였다.<sup>20)</sup>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대응을 살펴보면 첫째, 화재 등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재했고, 둘째, 화재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을 고려한 예방 대책이 미비했으며 셋째, 화재발생시 현장 상황 확인과 연락체계 미비로 급속한 2차 피해 확산을 초래하였다. 즉 초기 대응이 미숙하였다. 넷째, 지하철 및 지하공간의 대피기능에 한계가 있었고 다섯째, 소방, 경찰, 지하철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공조체계 미흡했으며 여섯째, 재난매뉴얼 부재로 국가적 대책과 연구기능이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및 수습단계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sup>21)</sup>

2006년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사고로 70여명이 중독되고, 승객 700여명이 긴급 대피하였다.<sup>22)</sup>

2010년 5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K씨(36세, 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는데, 이때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북한에 보고하였다.<sup>23)</sup> 북한이 열차와 지하철에 대한 국내정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남한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거나 유사시 이러한 지하철 관련문건을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크다.

## 2) 해외 사례

20) 권정훈 외, 앞의 글, 13면.

21) 백민호,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현장 조사와 재난관리 개선방향”, 방재연구지 제5권 제1호, 2003, 81면; 위의 글 재인용.

22) 연합뉴스, 2006. 9. 19.

23)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Print.html?idxno=63075>(2010. 6. 25 검색).

해외에서는 열차 및 지하철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외국의 경우 1968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 공격대상별 테러발생 현황에서 일반시설 및 사유재산 4,288번 공격으로 부상자 16,170명과 사망자 6,763명, 정부인사 및 시설 3,706회 공격으로 부상자 7,966명과 사망자 3,857명, 기업 및 기업인 3,335회 공격으로 부상자 12,312명과 사망자 5,061명, 그리고 열차를 포함한 교통수단 948회 공격으로 부상자 12,041명과 사망자 2,035명이 발생하였다.<sup>24)</sup>

외국의 테러사례를 보면, 2004. 3. 11 07:40경 스페인의 마드리드 남부의 중심역인 아토차역으로 진입하던 통근열차의 한 객차에서 최초 폭발한 후 인근 엘 포조역과 산타 에우게니아역에 정차하고 있던 열차에서 폭발물이 연쇄 폭발하여 200여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부상하였다. 스페인 당국은 초기에 범행단체로 ‘마스크 조국해방’(ETA)를 지목하였으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카에다와 연관된 ‘모로코 이슬람 전투단’이라는 조직이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5)</sup> 이 열차테러는 스페인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원 및 전후 이라크 파병에 따른 보복으로, 원격조종장치로 핸드폰의 알람을 사용하여 14개 폭발물의 시한폭탄을 폭발시켰으며, 결국 스페인의 파병 철회를 가져왔다.

2005년 영국의 런던 연쇄폭탄 테러 사건은 스코틀랜드에서 G8 정상회의(7. 6~8) 개최중 7. 7 08:50전후 런던 킹스크로스역 등 지하철 3곳 및 버스 1곳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사망자 56명 및 7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테러범들은 파키스탄계 3명과 자메이카계 1명의 아랍계 영국인으로서 TATP를 이용한 사제폭발물을 사용하여 테러를 자행하였다. TATP(Triacetone Triperoxide)은 아세톤과 과산화수소 등을 섞어 제조하는 분말형태의 폭발물로 런던 지하철테러에서뿐만 아니라, 2009

24) 김진혁, 앞의 글, 115면.

25) 경찰청, 테러 예방과 대응 매뉴얼, 2005, 79면.

년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기 폭파 미수사건 등에도 사용되었다.

2006년 인도 뭄바이 열차 테러는 7. 11 오후 6:09 인도 뭄바이 반드라역 등 7곳에서 통근열차 일등석을 대상으로 군용 폭약인 RDX(헥소젠) 사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900여명에 달했다. 테러발생 36시간후 친파키스탄계 카슈미르 분리 독립운동 무장단체인 ‘라슈카 타이바’ 조직원 20여명을 검거하였다.

2007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평화협상을 하루 앞둔 2월 19일 인도에서 열차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66명이 사망했다.<sup>26)</sup>

러시아의 지하철 테러는 2010. 3. 29일 07:52경 모스크바 ‘루비얀카’ 지하철역내 전동차 및 동일 08:40경 동역에서 네 정거장 떨어진 ‘파르크 쿨트리’ 역내 전동차 안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책임자는 여성 2명이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고, 이들이 북 카프카즈 지역의 이슬람 테러조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sup>27)</sup>

이처럼 열차나 지하철 테러의 특징은 이용자가 많은데 비해 이들 시설에 대한 경계가 허술하며, 또한 승객들의 출퇴근시간대를 겨냥하여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사상자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이 가장 손쉽게 테러 목표로 삼아 그들이 노린 테러목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 2. 폭탄 · 생화학 테러

### 1) 폭탄테러

26) 김진혁, 앞의 글, 117면.

27) 국민일보, 2010. 03. 30.

폭탄테러는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건물 등 시설물과 비행기 등 장비를 파괴하는 전술형태를 말한다.<sup>28)</sup> 국제테러 전체중 50% 가까운 테러가 폭발물에 의한 폭탄테러로 나타났다. 폭발물은 제조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료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유형이다.<sup>29)</sup>

테러 유형중 국내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경우도 바로 폭발물에 의한 폭탄테러유형이다. 특히 테러공격의 수단으로 폭발물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과 시설이 처참히 파괴되는 공포에 대한 상징적 효과가 언론에 발표됨으로서 다른 수단에 의한 공격보다도 폭발물 공격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탄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TC)테러, 2005년 7월 영국의 런던 킹스크로스역 폭탄테러, 2008년 9월 파키스탄의 메리어트호텔 폭탄테러, 그리고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시내 동시다발 연쇄 폭탄테러 사건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테러사건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호텔, 역, 극장,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sup>30)</sup>

국제 테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수단인 폭발물 및 총기류에 의한 폭과는 1996년 172건, 1997년 174건, 1998년 172건, 1999년 205건, 2000년 223건, 2001년 231건, 2002년 226건, 2003년 357건, 2004년 486건, 2005년 1,051건, 2006년 1,566건, 2007년 1,654건, 2008년 1,62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발물을 사용한 국제테러가 다른 총기 등에 의한 테러보다도 비중이

28)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341면.

29) 윤성원 외, 앞의 글, 10-11면.

30) 이경훈·김창훈, 앞의 글, 44면.

매우 크다. 2000-2006년 발생한 테러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치 213건, 무장공격 148건, 방화 140건 등의 순이었다. 2009.10.30-2010.4.30 발생한 테러유형별로는 폭과 690건, 무장공격 466건, 납치 72건, 암살 12건, 방화 11건, 기타 12건 등 총 1,263건이었다.<sup>31)</sup>

폭탄테러의 유형으로는 다량의 폭발물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 사람에 의해 운반되는 소규모 폭발물 자살테러, 그리고 폭발물을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설치하여 폭발시키는 테러 등이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 형태는 폭발물을 차량에 탑재하여 주차한 상태에서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폭발물을 실은 상태로 공격대상으로 돌진하는 자살폭탄테러로 발생하고 있다. 2010.1.25 주이라크 한국대사관과 450·900m 거리에서 터진 바그다드 시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연쇄 차량폭탄테러로 인해 대사관 유리창이 완파되고 에어컨 등의 기물이 손상되었으나 방폭 필름이 설치되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열차 및 지하철 폭탄테러시 선로위에 자동 타이머가 부착된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객차에 자동폭발장치가 부착된 폭탄을 실어둠으로서 일정시간이 되면 폭발을 일으키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sup>32)</sup>

테러단체들이 테러수단으로 폭탄테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제 폭발물 재료구입과 제작이 용이하고, 범행 후에는 도주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폭발물 제조기법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면서 폭발물에 의한 폭탄테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되어지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사제폭발물이 광범위한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중 화공약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공

31) 테러정보종합센터([www.tiic.go.kr](http://www.tiic.go.kr))의 테러사건통계자료이다.

32) 김진혁, 앞의 글, 117면.

약품을 간단히 배합함으로써 간단한 혼합화약류(산화제+연료)를 만들 수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제조한 폭발물도 음료수 캔이나 가방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발견 가능한 사제폭발물 형태로서 휴대용 전화기를 원격 기폭장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산업용 화약류가 가장 간편하게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폭탄 테러가 다른 수단의 테러보다는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의 자살폭탄테러 등에 있어서는 목표물로의 접근에 용이함과 테러 이후 선전효과 또한 커서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생화학테러

화학테러는 사람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독성가스나 액체, 또는 고체를 고의적으로 살포하여 살상하는 것이다. 화학테러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직접 피해를 미치므로 4천여종의 유해화학물질은 피해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화학테러 가능물질로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테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짧은 시간동안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독성 화학물질이 화학테러 가능물질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에는 염소, 암모니아 등의 산업용 유독가스나 사린, 시안화수소, 포스젠 등 군사용 화학작용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sup>33)</sup>

생물학무기 테러는 소량으로 대량 인명살상이 가능하고 값이 싸기 때

3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테러 전문대응과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009, 23면.

문에 테러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생물학 무기는 탄저균·페스트·콜레라 등의 박테리아, 천연두·황열 등의 리케 치아 및 보툴리눔 등의 독소를 포함 30여종이 이용될 수 있다.

테러조직이 탄저균을 테러무기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생물학 테러무기의 중요한 살포방법은 에어로졸 살포방법, 식품이나 식수를 통한 방법, 직접적인 주사방법, 동물이나 곤충 등의 병균 매개체, 그리고 사람과 사람간의 전염에 의한 방법들이다.

실례로, 일본 음진리교 사교집단은 가축을 대상으로 약품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호주에 4만 8천 에이커의 목장을 구입하고 있고 도쿄와 후지산 기슭에 2개의 생물학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최소 4회 이상의 생물학 테러공격을 시도한 바 있다. 1995년 3월에는 도쿄 지하철역에서 40세가량의 남자가 도시락 크기의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 3. 자살폭탄테러

자살폭탄테러란 특정 인물이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에 동원되는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을 피하는 테러의 한 유형이다. 자살폭탄테러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테러조직의 전술이다.

과거에는 자살폭탄테러의 공격대상이 상징성이 높은 군사시설, 외교시설 등 강성 표적(hard target)이었지만, 최근 자살폭탄테러의 공격목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쇼핑센터, 백화점, 재래시장, 대중교통수단 등을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테러조직이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테러의 피해가 크고 그만큼 공포 분

위기가 확산되기 쉽다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시설의 경우 보안 대책이 허술해 침투가 용이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1994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격은 총 87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다. 자살폭탄테러 사건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폭탄테러에 의한 희생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도 러시아, 이라크,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세계 각처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로 일어난 실질적 자살폭탄테러사건은 1981년 레바논 이라크대사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6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두 번째 자살 테러 사건은 1983년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의해 자행되었다.<sup>34)</sup> 헤즈볼라가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미군 해병대 사령부에 대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241명의 군인이 사망하였다. 1만2000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노란색 벤츠 트럭이 이른 아침 정문을 통과해 사령부 건물 정면으로 돌진해 폭발했다. 그리고 프랑스군 주둔지에서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58명이 사망하였다. 자살폭탄테러로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평화유지군이 철수하였다.

헤즈볼라의 자살폭탄테러는 점령군 철수라는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테러조직의 전술적 선택으로 정착되었다. 이 사건 이후 자살폭탄테러는 일종의 유행현상이라 할 만큼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극단적인 자살폭탄테러의 전형이 된 9·11 테러는 그 의외성으로 인해 미국인은 물론 전세계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자살폭탄테러의 주된 공격대상은 미군이지만 이라크전에 참전한 연합군에 대한 자살폭탄테러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

34) 최진태, 앞의 글, 349면.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 부근에서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는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대한 재건 지원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와 한국인에 대한 자살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자살폭탄테러의 주요 목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로 이슬람권의 반미·반서방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슬람권 국가에서 동조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폭탄테러 발생지역도 이라크뿐 아니라 인근 중동지역, 심지어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살폭탄테러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테러범이 직접 폭탄을 매고 자폭하는 방법, 둘째는 차량에 폭탄을 싣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이다.

자살폭탄테러는 보통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에 의해 자행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폭탄 벨트와 폭탄조끼를 사용하고 있다. 행인으로 가장한 테러범의 자살폭탄테러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공격에 사용된 폭발물의 종류와 원리, 테러범의 인적사항, 테러 조직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는 정교한 하부 지원체계와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에는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자주 사용되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마차, 심지어 말이나 당나귀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살테러에 아직은 남성이 압도적이지만, 여성 테러범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모스크바의 극장 관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테러범 41명 중 18명이 여성이었다. 2010. 3.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쿠나르주

의 진료소 부근에서 일어난 여성자살폭탄테러로 10명의 미군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의 배후자임을 밝혔다.<sup>35)</sup>

이처럼 여성이 테러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여성은 약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국제여론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과 남성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 검거될 위험이 적다는 이점을 노린 것이다.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할 시간대는 선정된 목표물에 따라 결정된다. 대중교통수단이 목표물이면 자행시간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버스에 탑승한 특정인의 암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한밤중에 몇몇 승객만 탄 버스를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 경우는 없다. 반면 나이트클럽 같은 시설에 대한 자살폭탄테러는 야간에 자행되며, 식당에 대한 공격은 식사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자살폭탄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투쟁방식의 이슬람화, 즉 ‘순교테러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알 카에다의 전술 중 하나는 자살폭탄테러다. 2001년 이후 알 카에다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국제 테러조직들의 연대가 강화됨에 따라 알 카에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슬람식 전술이 전파되었다. 체첸 조직들이 자살폭탄테러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체첸 내에서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알 카에다와 같은 과격조직과 연계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테러 가운데 상당수가 이라크에서 발생했고, 그 가운데 자살폭탄테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이라크 내에 외부의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이 개입하고 있거나 혹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자살폭탄테러는 다른 어떤 형태의 테러보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살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테러범의 인적사항이나 동기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 대량 희생자 발생에 따른

35) [http://cafe361.daum.net/-c21-/\(2010. 6.29 검색\).](http://cafe361.daum.net/-c21-/(2010. 6.29 검색).)

뉴스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각국의 언론이 집중적으로 주요뉴스로 처리한다. 이를 이용해 테러조직은 테러의 이유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 등을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전술적으로 자살폭탄테러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때로는 여론의 환기 및 관심 집중이 자살폭탄테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한다.

셋째, 자살폭탄테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경제적인 전술이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테러단체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하는 이유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피해와 반응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테러로 죽은 대원을 영웅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넷째, 자살폭탄테러는 공격시간과 공격장소를 조정하기가 용이하다.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리스트가 몸에 폭탄을 숨기고 목표물에 접근해 직접 폭탄을 터뜨리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높고 테러의 효과도 크다.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저지른 뒤 현장을 빠져나가 몸을 숨기는 절차가 필요없는 데다 테러조직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테러의 배후도 드러나지 않는다.<sup>37)</sup>

마지막으로 자살폭탄테러는 공격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협박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한 명을 죽이고 만명을 위협하라’는 테러리스트들의 슬로건은 이제 인공위성의 매체를 통해 한명을 죽이면 10억의 인구를 공포와 위협으로 몰아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sup>38)</sup>

36) 백영철, “철도테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테러연구 제27집, 경찰청, 2004, 97면.

37) 박완규, 테러리즘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67면.

38) 이태윤, 앞의 책, 197면.

## IV.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응방안

### 1. 테러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테러의 규정, 테러의 목적, 테러 행위, 테러 유형의 죄 등 테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표 3>에서와 같이 테러사건유형에 따른 책임기관이 다양한데, 무엇보다 경찰의 테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3> 테러사건 유형별 책임기관<sup>39)</sup>

테러유형	관할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국내 일반 테러	경찰청	방사능 테러	과학기술부
항공기 테러	건설교통부	화학 테러	환경부
해상 테러	해양경찰청	생물 테러	보건복지부
국외 테러	외교통상부	군사시설 테러	국방부

경찰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7조 지도점검」, 경찰청 훈령 제456호 국가대테러활동세부운영규칙 「제21조 테러예방대

39)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 평시국가 위기관리 정책방향과 과학기술 적용방안, 2007.; 테러 및 재난 활동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다.

책 및 지도점검」 법령에 따라 시설의 중요도와 이용자 수에 따라 연간 2~4회(분기1회 또는 반기1회)에 걸쳐 대테러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시설주가 국내에서 테러조직에 의한 대형 테러사건 발생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으며, 행정지도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없고, 또한 시설주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실질적 보완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 테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경찰의 사전 예방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 발생시 상당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테러 및 재난활동을 담당한 소방방재청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주가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서장 명의의 완공검사필증(완비증명서)을 교부받아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중들이 이용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령의 적용받는 업소에 대해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 시설측에서는 규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최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강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2명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와 재난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해

당시설 출입자에 대해 출입통제, 질문, 신원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이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경찰이 테러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령 제정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은 테러로부터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보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업무영역의 명확성을 기하고 대테러 대응활동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책으로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변화에 따른 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법령·제정·정비·보완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물의 기준과 규모·용도 및 이용자수 등에 따라 테러장비 설치 기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주의 불이행에 따른 규제와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전체적으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테러의 직접적인 대상인 국민들은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테러 관련 입법 개정을 통한 테러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 2. 테러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 1) 열차·지하철테러 대응방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지하철테러를 대비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열차·지하철 테러가 발생할 시, 지하공간의 대피로 확보, 방호장비 확보, 현장 대응관리, 유관기관 공조체계, 사후수습 처리 등 모든 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테러 현장에서 대응조치는 열차테러시 2차 폭발로 인한 피해방지를 사전에 조치하고, 현장 진입로상 장애요인 파악과 통로개척 조치, 뒤따르는 후속열차 차단 요청으로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목격자, 열차운행 관계자 등의 신병을 확보하여 사후수습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하철테러 역시 후속대향·열차진입 차단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 지하철 종합사령실 등 지하철 운영·통제조치 확인, 비상구 확보 등 신속한 비상대피로 개척, 폭발 등으로 인한 유독가스 배출장치 가동 확인, 초동조치 후 현장보존 및 출입자 통제 철저, 지상 현장지휘소 등과 통신 수단 확보 등의 과정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열차·지하철테러 예방을 위한 전문가적인 전담요원의 안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CCTV를 통한 상시 관리를 비롯하여, 지하철종사자 등의 협력과 함께 열차와 지하철 관련 종사자에 대한 테러대비 대응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용객을 상대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 폭발물 등 의심물체나 테러기도자를 발견하여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테러 의심물체와 테러기도자를 식별하여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련자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정보공유 및 테러 위험물건 발견시 조치요령 등을 전파하고, 환승지역 및 환승지하철역 등에 ‘방폭가방’ 등 폭발물 초동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경찰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취약시간대 순찰 및 검문을 강화하여야 한다.

## 2) 폭탄·생화학테러 대응방안

폭탄테러 발생시 테러대응절차는 초동단계, 대응단계, 진압단계, 사후처리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동단계(발생직후 현장조치)에서는 출입자, 차량등 현장통제, 부상자 구호, 주민대피등 현장활동을, 대응단계(대책기구 가동, 상황대응)에서는 현장지휘소·국내사건대책본부 설치, 협상전개, 합동조사반 운용 등을, 진압단계에서는 특공대등 전술작전전개를, 사후처리단계에서는 테러범 수사, 인적·물적 피해처리, 사후 대비책 강구 등 테러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폭발물 발견시 지구대는 현장상황 파악 보고·전파와 현장통제 및 주민을 긴급 대피토록 하고, 해당경찰서는 긴급 경력배치 및 사상자 파악과 소방·군부대 등 지원요청, 그리고 지방청은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특공대·폭발물 처리전문팀(EOD) 운영 과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폭발물 처리원칙은 무엇보다 주민을 우선적으로 안전지역으로 대피 유도하고, 폭발물처리팀 현장 진입과 폭발물 안전처리 순서로 진행한다.

테러 현장에 최초 현장 출동자는 현장상황 파악 보고 및 출입자 통제,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충격 금지, 주변 금속방패물이나 위험물 즉시 제거, 필요시 모래주머니나 매트리스를 주변에 설치, EOD 도착 즉시 인계 조치한다.

테러에 대한 현장조치사항은 최초 출동 현장근무자 상황 수시보고·전파, 지휘관 즉시 현장 입장, 임무부여 등 통합지휘, 위험지역으로부터 주민 신속 대피, 전기·가스차단, 위험물 제거 등 2차 폭발 방지(폭발물 처리반), 야간 상황시 관계기관 협조, 현장 전기가설과 진입로 확보, 사고현장 출입자 등 완전 차단, 구조장비·구급약품 확보, 유관기관 합동 구호활동 실시, 부상자 원거리 후송에 따른 충분한 후송차량 확보, 야간 상황시 관계기관 협조, 현장 전기가설과 진입로 확보, 방송·신문기자 등 언론기관 접근통제 및 홍보활동, 광범위한 통제구역 설정, 3선 개념의 경력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자살폭탄테러 대응방안

죽음을 각오하고 감행하는 자살폭탄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자살폭탄테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 방법과 방어적 방법이라는 두 가지 접근경로를 택하고 있다.

공격적 방법이란 테러조직의 본부 및 훈련캠프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조직 지도자를 체포하고 표적 살해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은 테러조직의 지도자와 간부에 대한 살해 혹은 체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적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간부들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조직 재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이 하마스 지도자 야신과 란티니를 살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어적 방법이란 자살폭탄테러범이 공격목표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혹은 체포하는 것이다. 자살폭탄테러가 성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주요시설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 인터넷 등에 노출되기 쉬운 관련 시설의 민감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유사시 국민이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테러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것도 방어적 방법의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적인 테러와 연계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조직이나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에 의한 테러도 대비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자살폭탄테러의 가능성은 북한에 의해 자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북한 특수부대 8만명이 남북교전시 이라크와 아프칸의 무장단체와 유사한 전술로 자살폭탄공격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0)</sup>

40)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360268&logid=4370464>, 2010. 5. 30 검색.

자살폭탄테러를 대비한 경찰특공대의 공격적 방법과 방어적 방법의 지속적인 테러대응훈련이 필요하다.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대응은 먼저 북한을 대비한 공격적 방법을 통한 대응책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어적 방법의 대테러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살폭탄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도로 계산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살폭탄테러 빈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며, 정치적 협상을 위해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노력을 통해 자살폭탄테러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3. 테러대응훈련과 대테러역량 강화**

#### **1) 테러대응훈련 강화**

경찰청은 지난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 뒤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인 ‘을호 비상령을 발령 및 대테러상황실을 가동하고 도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체계적인 순찰과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주와 협의해 안전 활동 강화를 지시하고,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에도 경찰력을 배치해 테러에 대비하였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및 화재 등을 대비한 매뉴얼은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재난 대비에 치중하여 있고, 테러예방 및 테러발생시 조치요령 숙지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테러 상황에 따른 매뉴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은 지하철역 등에서 모형 폭발물가방을 이용한 상황부여 및 방폭 가방을 활용한 현실감 있는 대응조치로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민·관·군경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테러대응훈련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무장단체의 인질극, 독가스, 폭발물 테러와 대형화재에 대비한 민관군경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 테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테러대응훈련은 다중이용시설 테러를 가상 설정해 테러 진압훈련과 독가스 살포에 따른 대피 및 오염 제독 훈련, 건물화재에 따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재난 수습 및 복구훈련 등으로 실시했다. 기동타격대 대원들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범인을 향해 저격준비 연습을 하였다.

테러대응과 대비는 국제테러동향을 주시하고, 이의 파급효과를 항상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국내외 테러징후현상이나 국제테러분자의 국내 잠입 등에 대한 국내외 테러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초기에 대테러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테러정보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첩보를 평가하는 분석과정의 생산물로서, 관련된 첩보들을 통합하여 집약적인 꾸러미로 만든 후 테러 예방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만들어 낸 테러관련 현상에 대한 결론이나 예측”이다.<sup>41)</sup> 경찰은 테러첩보와 정보 입수 및 테러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신속 전파채널을 상시 유지하여, 의심되는 첩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첩보입수, 내사, 검거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사, 경비(대테러) 등 유관기능을 비롯하여, 대외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41) 표창원, 대테러 경찰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테러연구 제29집, 경찰청, 2006, 96면.

구축하여야 한다.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모의테러 대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테러 유형별에 따른 테러대비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 2) 대테러 활동역량 강화

대테러활동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정부,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리즘 혐의자의 권리, 테러리즘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리즘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sup>42)</sup>

9·11 테러 이후 선진국가에서는 자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극적인 반테러(anti-terrorism)에서 적극적인 대테러(counter-terrorism)로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sup>43)</sup>

G20 정상회의 및 아프간 재파병 추진에 따른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경찰서 주관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천안함 사고원인이 발표 뒤 비상근무체제인 ‘을호 비상령’을 발령, 대테러상황실을 가동하고 도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체계적인 순찰과 점검에 나섰다. 대테러FTX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G20 홍보동영상 및 폭발물 위력시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최근 테러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대테러 관련 공동

42) 정우일,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90면.

43) 이상원,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193면.

마인드를 형성하였다. 관할 지구대에서는 지하철역 연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활동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철역내 승강장, 환승통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의 대테러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기적인 테러예방활동과 테러대응훈련 실시, 테러 전담 전문가 및 전문 테러대응 전담요원 양성, 테러정보체계의 일원화, 경찰의 대테러센터의 역할 강화, 그리고 경찰특공대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첨단 장비 확보 등이 요구되어진다.

## V. 결론

테러조직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요한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테러의 피해가 크고 그만큼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기 쉬운 점도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보안이나 테러대책이 허술하여 침투가 용이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는 막대한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와 건축,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유

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조체제를 통한 안전관리와 테러 예방이 필수적이다. 테러예방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취약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고, 테러유형별 발생 특성, 테러유형별 대응체계와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평가의 산정, 그리고 테러대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테러가 모든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의 글로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테러 중에서 폭탄 테러의 비중이 높다. 테러범이 테러 대상으로 열차나 지하철을 가장 손쉬운 테러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각종 테러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폭발물의 색출과 열차나 지하철로의 유입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격적 방법과 방어적 방법을 통한 대테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테러의 대응훈련과 대테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테러위협요인에 대한 완벽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대테러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한 테러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 국내외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적정규모의 예산·인력·장비의 투입, 실전테러모의훈련의 실시, 시민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테러대응방안의 업그레이드 등이 상시 필요하다. 테러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은 테러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를 통해 대테러활동을 전담케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국민의 테러 대응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테러를 대비하고, 안전을 중시하고 대비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 역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물체나 거동수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테러로 인한 대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

러는 특정한 대상이 아닌 바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한 테러임을 인식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 각자도 테러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들 역시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전도가 강화된 건물, 합리적인 안전제도, 이를 지키고 따르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테러대비 활동 및 시민의 테러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야말로 테러 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경찰청, 2009.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 경찰청, 2007 경찰백서, 경찰청, 2007.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경찰청, 2006.
- 경찰청, 대테러 연구 제30집, 경찰청, 2007.
- 경찰청, 대테러 연구 제29집, 경찰청, 2006.
- 경찰청, 대테러 연구 제28집, 경찰청, 2005.
- 경찰청, 대테러 연구 제27집, 경찰청, 2004.
- 경찰청, 테러 예방과 대응 매뉴얼, 경찰청, 2005.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테러전문대응과정, 2009.
-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 박완규, 테러리즘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소방방재청,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08.
-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 평시국가 위기관리 정책방향과 과학기술 적용방안, 2007.
- 이경훈,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 설계기준 및 설계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 이태운,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 2010.

## 2. 논문

- 권정훈 외,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 권정훈·김태환,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 김영택 외 공저의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생물테러 인식도 조사“, 2005년도 제59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5.
- 김지희 외, “생물테러재난안전교육을 위한 문제중심학습개발”,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 김진혁,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 박준석,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 백민호,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현장 조사와 재난관리 개선방향”, 방재연구지 제5권 제1호, 2003
- 백영철, “철도테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테러연구 제27집, 경찰청, 2004,
- 윤성철, “테러대응법제의 정비방향”,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 윤성훈·이경훈·김지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 예방 디자인”,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09.
- 이계수, “테러대응 법령과 기구에 대한 비교연구”, 치안논총, 치안정책

연구소, 2006.

이경훈 · 김창훈,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 (building security control) 디자인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1호, 2009. 5.

이상원,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정우일,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2009.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표창원, “CCTV 등 보안감사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 확보체계 구축방안”,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홍동표, “한국의 테러대응법과 위기관리체제의 문제점 및 대책”, 제13기 치안정책과정 강의모음집, 경찰대학, 2006.

책임연구보고서 2010-12

## 국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대응방안

---

---

201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중 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